

북한의 도발사례 분석

이 윤 규*

1. 서론
2. 북한의 침투도발 본질
3. 북한의 연대별 침투도발 사례
4.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분석
5. 결론

1. 서론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¹⁾에서 남북한 쌍방은 일체의

*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교수(정치학박사)

1)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은 6·25전쟁이 발발한지 3년 1개월 2일째, 그리고 1951년 7월 10일 휴전회담을 개시한지 2년 18일 만에 조인되었다. 정전협정 조인식은 휴전회담 유엔군 측 수석대표 ‘헤리슨’ 소장과 공산군측 수석대표인 ‘남일’이 판문점에서 먼저 서명하고, 양측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유엔군사령관인 ‘클라크’ 대장과 북한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김일성’과 중공군사령관인 ‘팽덕희’가 최종서명을 하였다. 정전협정 조인일시는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이었으며, 협정 발효시점은 이날 22시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27일 22시 01분 부터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병력 및 장비들은 비무장지대로부터 철수를 개시하게 되었다. 정전협정 문서는 영문(英文), 중문(中文), 국문(國文)으로

군사적 도발을 중지하고 상호합의 한 5개조 63개항의 정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1956년 4월 23일 노동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평화통일 선언문과 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는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동시에 무장간첩을 남파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다차원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남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특히 2010년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은 과거 60여 년 동안 자행해 왔던 침투도발²⁾과는 수단방법과 도발수준에서 ‘한반도 판 9·11테러’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도발이었다. 북한은 대남도발을 우리식 사회주의 유지에 대한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응전(應戰)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곧 북한 세습독재체제가 존속하는 한 언제라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대남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6·25전쟁이후의 남북한 관계는 북한의 대남도발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6·25전쟁 이후의 북한의 대남도발 역사는 한반도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는 도발사례의 통계나 경과위주의 서술로서 왜 그러한 도발을 감행했으며,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대비해야 하는 교훈적인 연구와 저술은 부족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에 대해서 그 당시는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키고 많은 교훈을 일깨워주었지만 이를 대비태세에 접목

작성되었으며, 각각 6부씩 18부에 서명 후 교환하였다.

- 2) 『합동·연합작전용어집』, 합동참모본부, 2010에 “**도발**이란 적이 특정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의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에 가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 “**침투도발**이란 적이 특정임무수행을 위해 우리 영역을 **은밀히** 침범하는 일체의 위해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도발과 침투도발의 구분은 은밀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도발**은 대남혁명전략의 목적이든 북한의 체제유지 목적이든 우리의 국민과 재산 또는 영역의 일체의 위해 행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도발 중 **침투도발**은 한반도 적화목적이나 우리의 군사적 안보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북한의 군사적 행위나 테러, 정전협정 위반** 등의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시키지 못한 점도 많았다.

본 논문은 6.25전쟁이후 북한의 대남 침투 도발사례를 분석하여 객관적인 역사자료와 특징을 도출함으로써 북한 도발실체를 이해하고 교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합동참모본부의 공식 공개된 자료와 육군군사연구소 「대침투작전사 시리즈」, 각 부대의 전투상보·부대사 등을 인용하였고, 증언과 현장 확인을 통해 내용과 자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다.

2. 북한의 침투도발 본질

가. 북한의 대남전략 실체

북한의 대남전략 최종목표는 한반도적화통일이다. 이러한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대남혁명기구를 조직 운용하고 있고, 대남전략 최종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침투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 분석을 위해 대남혁명의 이론적 배경과 침투도발 관련기구 및 전략전술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1) 북한의 혁명론

북한의 통일론은 대남혁명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북한에서 체계화시킨 혁명과 통일에 관한 이론은 ‘남조선혁명 이론’과 ‘조국통일 이론’이 있으며 상호연관성과 공통점이 있다. 즉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곧 남조선혁명을 위한 투쟁이 되며, 남조선혁명을 수행한다는 것은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있고,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은 다 같이 지역적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투쟁대상으로서는 미국 및 남한을, 그리고 주체사상을 지도적

이념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김일성의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론의 기본구도는 ① 3대 혁명역량을 강화하여, ② 남조선혁명을 이룩하고, ③ 조국을 통일시켜 ④ 전 한반도에서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는 계속혁명론(繼續革命論)이다. 계속혁명이란 3대혁명운동(사상, 기술, 문화)에 입각하여 한 단계의 혁명이 성공하면 곧이어 다음 단계의 혁명을 계속 추진하여 최종혁명이 승리할 때까지 혁명투쟁을 쉬지 않고 진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³⁾

북한의 ‘조국통일 이론’은 주체사상의 근본원리와 요구를 구현하고 조국통일의 주인은 전조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국통일문제는 한민족 내부문제이며 외세에 의하여 유린된 민족자주권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민족자주권은 남한이 아직까지도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조국통일 이론’에서 주장하는 자주란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대남혁명의 기본목적은 북한 노동당규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김정일 사망 후 최초로 개최된 당대표자 회의(2012.4.11)에서 개정한 노동당 규약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데 있다”⁴⁾라고 하면서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선군사상 구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당 규약에서 용어의 표현은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대남혁명의 목적은 여전히 대남 적화혁명으로서 변화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전국적 혁명과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3) 박채용, 『북한정치연구』, 세계 아기선교 출판사, 1995, 610쪽.

4) 북한 노동신문, 2012.4.12일자.

남한이 혁명 이전의 단계에 놓여 있다는 인식으로서 ‘조국통일이론’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2) 북한의 대남전략

북한은 정권초기부터 자신들의 유일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혁명기 지전략’에 의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는 전략을 수립 추진해 왔다.⁵⁾ 혁명기 지전략은 무력통일을 위해 북한지역의 전쟁준비를 강화하여 혁명의 근거지를 구축한 다음에 그 역량을 바탕으로 전 한반도에서 공산혁명을 완수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혁명기 지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북한정권수립 1년 만인 1949년에 무력으로 남한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준비를 서둘렀고 드디어 1950년 6월 25일 ‘혁명기 지전략’을 추구하는 소위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하여 남한 적화통일을 위한 기습남침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대남전략은 “모든 전쟁은 그 원인이 되는 정치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평화 역시 다른 수단으로 전쟁을 계속하는 것”이라는 전쟁을 당연시 하는 군사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남한을 민족해방의 대상지역으로 상정하여, 간첩침투, 군사도발, 테러 등을 감행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북한의 사회 전반 및 인민전체를 전쟁준비태세를 구축하여 대남적화혁명을 통해 한반도를 통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의 통일전략과 같다고 볼 수 있다.

3) 3대 혁명역량 강화

북한은 1964년 2월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4기 8차 전원회의에서 전 조선혁명 달성을 위한 3대혁명역량 강화노선, 즉 북한사회주의 혁명역량강화, 남한사회주의 혁명역량 강화, 국제 사회주의 혁명

5) 이도영 외, 『북한의 대남전략 해부』, 남북문제연구소, 1994. 15~20쪽.

역량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3대 혁명역량 강화 노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조선 혁명역량 강화는 정치적 역량, 경제적 역량, 군사적 역량으로 구성된다. 정치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 인민들을 철저히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혁명화, 노동계급화하며, 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노동당과 혁명 건설의 무기인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다.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자급자족주의체제를 강화하고, 3대 기술혁명을 철저히 수행하여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사적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력국방의 원칙에 따라 4대 군사노선⁶⁾을 실천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둘째,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란 남한에서의 민주세력 지원, 남한 인민의 사상적 각성, 통일전선 형성, 국군의 와해, 무장공비 침투 등 남한사회 혼란 및 교란 등이 실천과업이다. 여기서 남한의 민주세력 지원이란 남한 내의 친북·중북세력과 반정부세력의 정치적 투쟁을 고무·선동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북한은 간첩납파, 밀입북 유도, 지하당 조직, 사이버 심리전 등을 통해 친북·중북세력과 연계하며 투쟁지령과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공작을 전개해왔다. 특히 남한의 발달된 사이버공간과 점증되고 있는 남남 갈등으로 인해 남한 내 혁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

셋째, 국제 혁명역량 강화란 사회주의국가 및 제3세계 국가 인민들과의 유대강화, 자본주의 국가내의 노동운동 세력과 단결할 것, 전 세계 반제평화 애호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6) 1962년 12월에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구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문제”를 토의하고 채택된 것으로서 이 정책은 구체적으로 전 인민 무장화, 전국토 요새화, 인민군의 간부화, 군 장비의 현대화란 4대 군사노선으로 표명되었다. 국방대학교, 『북한의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국방대학교, 2012, 52쪽.

들어서 공산권 국가들이 몰락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북한은 국제혁명 역량 강화를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되었고, 특히 마약, 위조지폐, 탈북자 처형 등 인권유린, 핵무기 개발 시도, 연평도 포격,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인식되어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3대 혁명역량 강화는 북한의 대내외 상황과 남북관계 및 한국사회의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북조선 혁명역량 강화는 김정은 세습 체제 유지에 주력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 혁명역량 강화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데 급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는 남한사회에 유리한 대남 혁명역량 여건을 활용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다차원 영역에서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단방법으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향후에도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는 북조선 혁명역량과 국제적 혁명역량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상황전환을 위해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4) 북한의 대남혁명전술

북한의 대남적화혁명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적 행동차원인 대남혁명전술은 ① 지하당 구축전술, ② 통일전선전술, ③ 대중투쟁전술, ④ 적군외해 사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다음과 같다.⁷⁾

첫째, 지하당 구축전술은 남한 내에 '조선노동당'의 전위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다. 북한은 1960년대에 통일혁명당, 인민혁명당, 1970년대에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1980년대에 한국민족민주전선, 1990년대에는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최근의 일심회 및 왕재산 사건에서 나타났듯이 남한에 지하당을 구축하고 종북세력을 확대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처럼 북한이 지하당 구축에

7)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 1983-1993』, 북한연구소, 1993, 942~944쪽.

집요한 노력을 전개하는 이유는 지하당을 혁명주력군의 거점으로 삼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혁명이 일어날 경우 남한 자체의 혁명으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전선전술은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직 전술이다. 통일전선은 공산당이 일정한 혁명단계에서 주적을 타도하는데 공산당세력의 힘만 가지고는 불가능할 때 필요한 동조세력을 획득하고 그들과 잠정적인 동맹체를 형성하여 투쟁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통일전선 형성전술은 일차적으로 주적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동맹하여 그들의 힘을 활용, 타도시키고 그 이후에 공산세력을 지지하는 세력 이외에는 모두 제거하는 전술인 것이다. 북한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전선 형성원칙은 조직상 원칙으로 계급노선을 견지하며 균등노선을 결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전술상의 원칙으로는 ① 하층 통일전선을 기본으로 하고 상층 통일전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킬 것, ② 낮은 형태의 공동투쟁을 점차 높은 형태의 공동투쟁으로 발전시키며, 부분적인 연합에서 전면적인 연합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 ③ 통일전선체내에서 중간층, 민족자본가들과 단결하는 가운데 투쟁할 것 등이다. 실제로 북한은 남한혁명을 위한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1949년 조국통일 민주주의 전선(조국전선)을 결성한 바 있고, 이후 반미구국통일전선, 반파쇼 민주연합전선 구축을 외치며 1980년대 통혁당의 후신인 한국민족민주전선을 위장 출범시킨 바 있다. 1990년대 들어 전 민족적 통일전선 형성을 위해 범민족적 대회를 통해 남북한과 해외동포를 연합한 친북반한 통일전선체인 범민련(조국통일 범민족 연합),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 청년학생연합) 등을 결성하고 활동하였다.⁸⁾

셋째, 대중 투쟁전술은 노동자나 일반 민중들의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 인상, 노동환경 개선 등의 구호를 내세워 경제투쟁을

8) 차주완,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변화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52~54쪽.

전개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대규모 파업, 시위, 폭동, 무장봉기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합법·비합법·반합법 투쟁이 있으며, 이를 배합하기도 한다.

넷째, 국군와해전술은 국군을 와해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여 민족군대, 인민군대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이다. 북한은 국군을 미제 식민지 통치의 무력적 기초이며 반동통치의 중추세력이라고 규정하고 혁명 성사를 위해서는 반혁명 무력을 분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군 내부에 침투하여 상급자의 명령 기피, 도주 등 낮은 형태의 투쟁으로부터 항명, 폭동과 같은 높은 형태의 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부분적인 연합투쟁에서 전 사단, 전 군단 등 높은 형태의 전면적인 연합투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⁹⁾

나. 북한의 대남혁명 기구

북한의 대남혁명기구는 대남적화통일을 위한 최고 상위조직으로서 최고 권력의 직접적인 지도와 지령에 의해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조직이나 노동당 대남정책 결정기관과 지휘체계는 연계되어 있지만 때로는 별도 조직으로서 군과 당의 타 조직보다 과업이나 운용 측면에서 우선적 지위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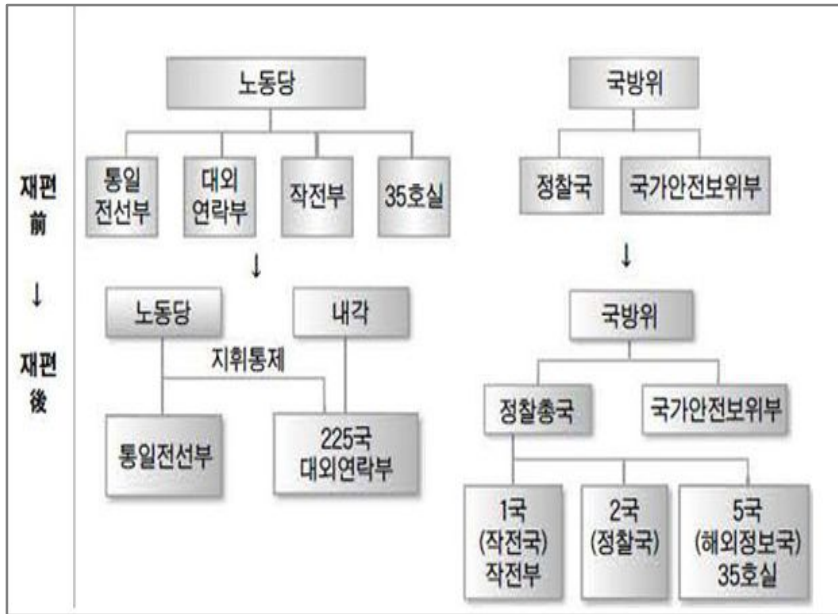
이 대남혁명기구는 수시로 변화되고 또 비밀조직이기 때문에 북한문헌에도 잘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정보기관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 자료와 탈북귀순자 증언, 정보기관의 첩보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⁰⁾

9) 조선노동당,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 조선노동당출판사, 168쪽.

10) 유동렬, 「북한의 대남공작기구의 개편의 의의 및 전망」, 『합참지 44호』 14~17쪽과 2010년 4월 19일자 인터넷 안보웹진, 『코나스 플러스(제32호)』을 재정리한 것임.

북한의 대남혁명기구는 <그림 1>과 같이 2009년 5월에 일대 변혁을 가져왔다. 2009년 개편 전 대남혁명기구는 노동당 주도로 수행해 왔다. 즉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에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대남사업담당비서를 두고 그 휘하에 대외연락부, 통일전선부, 35호실(구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를 두었으며, 국방위원회 통제하에 총참모부 정찰국, 국가안전보위부 등 6개 기구에서 수행하여 왔다. 이들 대남혁명기구는 각자 독립성을 유지한 채 독자적인 조직과 선전공작, 침투도발을 수행하고 있고, 중요 공작사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정예 공작요원을 차출하여 특별팀(TaskForce)을 편성하여 수행해 왔다.

<그림 1> 2009년 5월 변경 전·후 대남적화혁명기구 비교



※ 출처 : 인터넷 안보웹진, 『코나스 플러스(제32호)』, 2010.4.19.

그러나 이러한 대남혁명공작기구는 2009년 5월에 당 주도에서 군 주도(국방위원회)로 일대 변화를 가져 왔다. 변화된 내용은 <그림 1>과 같이 국방위원회 직속으로 정찰총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작전국(舊 당 작전부), 정찰국(舊 총참모부 정찰국), 해외정보국(舊 당 35호실)을 전환 편성하고, 당 대외연락부는 225국으로 변경하였다. 다만 당 통일전선부는 축소하여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변경된 대남혁명조직의 지휘 체계는 국방위위원장 ⇒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대남공작 담당 ⇒ 정찰총국장 및 225국장, 그리고 통일전선부장 등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은 국방위제1부위원장 겸 당 총비서이기 때문에 통일전선부와 내각의 225국도 결국 김정은 국방위 제1부위원장의 지휘 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대남혁명기구의 역할과 기능도 대남공작 비밀사업의 속성상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존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것이며, 당 주도에서 군주도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대남공작이 과거 울진삼척 무장공비침투, 대한항공(KAL) 폭파 등과 같이 초강경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개편 후에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 등을 자행한 것이 그 변화징후라고 판단되며, 김정은의 체제유지를 위해 강경군부의 관계유지를 위해서라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볼 수 있다.

3. 북한의 연대별 침투도발 사례¹¹⁾

가. 1953. 7. 27 정전협정 이후

1) 시대적 상황과 침투도발 전개양상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이 조인되어 동족상잔의 6·25 전쟁이 중지됨으로써 외면상의 평온을 되찾았으나, 북한은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병력증강과 신무기의 도입, 그리고 비행장 건설 등 또 다시 전쟁준비에 광분하면서 중공군의 압록강 북안으로의 철수에 상응한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였다. 국군은 휴전에 방심하지 않고, 전시와 같은 결전태세의 완비와 전력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보유 전력을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을 정비하여 야전군 사령부를 창설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1954년에 체결된 ‘한·미의정서’에 의해 72만 명의 군이 유지되었으나 1957년도에 미국 측으로부터 10만 병력 감축제안이 있어 63만 명으로 감축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군 장비의 현대화 사업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남북한의 시대적 배경에서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위장 평화공세와 대남도발 및 간첩, 테러 등 화전양면전술을 전개하였다. 특히 6·25전쟁 중 남노당에 의한 우리의 후방지역에서 봉기와 유격전이 잘 전개되지 않아 후방에서 제2전선이 형성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후방지역에 대한 교란을 위한 무장공비와 간첩들을 남파하고 테러 및 납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정전이후 1956년

11) 북한의 연대별 도발사례는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육군본부 군사문제연구소의 『대침투작전사 시리즈』와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대학의 교재 등 공인기관의 연구 내용과 자료를 인용하고 정리하였다. 아울러 각 연대별 대내의 정세는 대남도발사와 관련된 내용위주로 작성된 육군본부, 『대침투자작전시리즈』와 국방대에서 매년 발간되는 『국가안보정세』 내용을 반영하였다.

9월까지 3여 년 동안 249건의 대간첩 작전 및 검거로 375명의 북한 남파간첩을 체포한 것은 그 실증적 근거가 된다.¹²⁾

북한은 1956년 4월 23일 노동당 제3차 전당대회에서 ‘평화통일 선언문과 신 5개년 계획’ 발표 등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무장간첩 남파를 계속하였고, 1957년 11월 11일에는 동해에서 어업 중이던 우리어선 8척을 납치한 이후 간첩선과 무장공비 남파, 테러를 계속 감행하였다. 정전 이후 1950년대 북한의 침투도발 주요사례는 <표 1>과 같다.

<표 1> 정전 이후 195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57.11.11. 우리어선 8척 납치	'58. 9. 8. 동해 무장간첩선(사실2, 체포2)
'58. 2.16. 대한민국항공사(KNA)납치	'58.10. 6. 인천 무장간첩선(체포4)
'58. 4.10. C-46수송기 납북 시도	'59. 7.27. 무장선박 격침(사실5, 체포2)
'58. 4.24. 조기잡이 어선 1척 납치	'59. 8. 9. 북한군 우리어선 7척 납치
'58. 6. 8. 서해안 무장간첩선(사실3, 체포1)	

2) 주요도발 사례 : 창랑호 납북 및 공군기 납북 시도

창랑호 납북은 1958년 2월 16일 11시 30분 부산 수영비행장을 출발한 대한민국항공사(KNA : KAL전신) 소속 쌍발여객기(DC-3)가 서울로 운항하던 중 승객 28명과 승무원 4명을 태운 채 북한 무장간첩에 의해 강제 납북된 사건이다. 북한은 납치 다음날에 평양방송을 통해 “남한의 전쟁정책에 반대한 남조선인민의 의거 입북”이라고 허위 선전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비무장 민간비행기 납치를 규탄하는 세계 여론이 비등해지자 3월 6일에 조종사 승무원과 가족 8명을 범인으로 조작하여 억류하고 승객 26명만 송환하였다. 한편 1958년 4월 10일, 창랑호 납북사건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공군

12) 국방대학교, 『건군 50년 한국 안보환경과 국방정세』, 국방대학교, 1988, 79쪽.

C-46수송기의 납북을 시도하였다. 대구를 출발하여 서울을 향하던 수송기가 평택 상공을 지날 무렵 북한 간첩인 현역 공군대위 최정일이 미제 4구경 권총으로 통신사 김상호 하사를 살해한 후 월북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조종사 김갑규 대위와 부조종사 최병린 중위, 정비사 천병훈 중사에 의해 제지당하고 실패하였으며 범인은 군사재판소에 회부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다.

나. 1960년대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1) 1960년대 대남 침투도발 현황과 전개 양상

정전협정이후 50년대에는 전후 복구와 휴전선 설치 및 유엔 정전위원단의 감시 등으로 인해 대남도발은 빈번하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남도발은 1960년 4·19의거이후부터 감행되었으며, 1960년대 북한의 연도별 대남 침투 도발 현황은 <표 2>와 같이 총 933건이며 지상침투 도발은 472건, 해상·해안침투 도발은 439건이다. <표 3>은 1960년대 주요 대남 침투도발 사례이다.

<표 2> 1960년대 연도별 대남 침투도발 현황

구분	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계	933	86	58	63	47	60	91	184	141	144	86
지상	472	28	14	16	17	20	21	96	104	97	59
해상	439	54	39	19	29	40	68	82	35	46	27
불상	22	4	5	1	1		2	6	2	1	

※ 출처 : 육군본부, 『침투사건편람 II집('53~'68)』, 1986, 866쪽과 『침투사건편람 III집('69~'76)』, 1990, 793쪽을 재정리.

〈표 3〉 1960년대 주요 대남도발 사례

진주 덕이마을 무장공비 침투(1966.5.17.)	경원선 폭파사건(1967.9.5.)
해군 당포함 격침 사건(1967.1.19.)	경의선 폭파사건(1967.9.13.)
중부전선 교전(1967.4.12.)	1·21사태(1968.1.21.)
격렬비열도 간첩선 격침(1967.4.17.)	푸에블로호 피랍사건(1968.1.23.)
화천군 비무장지대 침투(1967.4.12.)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1968.11.2.)
서부전선 미군막사 폭파사건(1967.4.22.)	주문진 무장간첩사건(1969.3.16.)
강릉 고단지구 무장공비 침투(1967.5.21.)	EC-121 격추 사건(1969.4.15.)
연평도 근해 어선포격사건(1967.5.27.)	1차 흑산도 간첩선 격침(1969.6.9.)
대성동 미군트럭 기습사건(1967.8.7.)	2차 흑산도 간첩선 격침(1969.10.23.)
서부전선 군용트럭 기습사건(1967.8.10.)	대한항공 YS-11기 납북(1969.12.11.)
판문점 미군막사 기습사건(1967.8.28.)	해군 방송선 피랍사건(1970.6.5.)

1960년대 침투도발 전개양상의 특징은 육상 침투도발이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다. 특히 휴전선 전 지역에서 거의 매일 침투도발이 있었고, 미 2사단지역에서는 1일 평균 4회의 침투기도가 있었다. 침투도발을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미 2사단이 담당한 지역인 파주지역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수도권까지의 단거리 침투에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미군이 월남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수행능력이 제한된다는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미군에게 많은 피해를 줌으로써 조기에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5년 이후에는 지상 침투도발은 단순한 공작원 침투뿐만 아니라 게릴라전식의 형태를 띠는 침투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들은 아군 지역에 침투하여 경계초소나 막사, 작업병력, GP 식수운반조나 보급추진조, 수색 및 매복작전 병력 등에 대한 무차별 습격을 통하여 아군 시설 파괴, 병력에 대한 살상 및 납치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는 아군 이동통로에 지뢰 또는 TNT를 매설하여 이동병력을 살상하거나 차량을 파괴하기도 하였다. 수중침투도발은 1960년대 초반에는 주로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이용하였고, 1965년 이후에는 연천군 임진강 상류를 다수 침투 도발하였다. 수중침투도발 수단은

수영에 의한 침투도발을 시도하였으나 때로는 소형잠수정이나 소형 선박을 이용하였다.

북한은 1968년에, 전 남방한계선에 철책이 구축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목적보다 철책을 뚫고 후방지역으로 침투하는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철책을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침투에 활용할 목적으로 소형땅굴을 구축하는 방법을 강구하였다. 최초의 소형땅굴침투 시도는 1968년 미 2사단지역으로 철책 하단을 굴토하여 아군 후방지역으로 침투하였으며, 197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소형땅굴을 구축하여 침투도발을 기도하였으나, 1971년 연천, 인제, 고성지역에서 아군에게 조기 노출되어 성공하지 못했다. 이후 북한은 전 전선에서 본격적으로 남침용 땅굴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전후방 동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하였으며, 1970년대 발견된 것만으로도 4개에 이른다. <표 4>는 1960년대 북한의 대남침투에 대한 작전결과 전과를 제시한 것이다.¹³⁾

북한의 대남침투도발 외에 함정이나 공작선을 이용하여 해상에서 우리 어선들을 불법으로 납치하는 사건들도 빈번하게 자행하였다. 1961년부터 1970년까지 북한이 대한민국의 어선을 강제로 납북한 사건은 <표 5>에서와 같이 총 319척에 2,234명이나 되었으며 어선 287척과 1,937명의 선원은 귀환하고 나머지 어선 32척과 297명의 선원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표 4> 1960년대 대침투작전 결과 전과

구분	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침투인원	2,693	115	104	57	96	142	210	694	601	429	245	
전과	소계	1,447	86	92	45	56	85	90	372	406	125	90
	사살	954	12	26	7	10	21	33	297	376	94	78
	검거	418	67	57	33	42	48	45	62	27	26	11
	자수	75	7	9	5	4	16	12	13	3	5	1
도주	1,246	29	12	12	40	57	120	322	195	304	155	

13) 육군본부, 『침투사건편람 II집』과 『침투사건편람 III집』 참고하여 재정리.

〈표 5〉 1961~1970년 어선 납북 현황

구분	납 북		귀 환		미귀환	
	선박(척)	인원(명)	선박(척)	인원(명)	선박(척)	인원(명)
현황	319	2,234	287	1,937	32	297

※ 출처 : 해군본부, 『해상대침투작전사』, 1988, 71쪽.

2) 주요 대남도발 사례

가) 1968년 1·21 사태(청와대 기습 사건)

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 민족보위성 정찰국 소속의 무장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하여 서울 세검정고개까지 침투하였던 사건이다. 북한의 특수부대인 124군부대 소속 31명이 청와대 습격과 정부요인 암살지령을 받고, 한국군의 복장과 수류탄 및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고 휴전선을 넘어 야간을 이용하여 수도권까지 잠입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세검정고개의 자하문을 통과하려다 비상근무 중이던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검문경찰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단총을 무차별 난사하는 한편,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에도 수류탄을 던져 귀가하던 많은 시민들이 살상 당하였고, 작전 현장에서 비상근무를 지휘하던 종로경찰서장 최규식 총경이 무장공비의 총탄으로 순직하였다. 군·경은 비상경계령을 발령하고 현장으로 출동, 28명을 사살하고 무장공비 김신조를 생포하였다.

1·21사태는 남북한 정세와 상황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북한이 대남적화공작에서 적극적인 유격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후 1967년 4월 정찰국 산하에 유격전특수부대인 ‘제124군부대’가 편성되었고, 이들은 북한이 대남적화공작을 위한 적극적인 유격전 활동에 앞서 여건조성과 작전환경을 탐색하기

위한 국가차원에서 감행된 대남도발이었다. 또한 아군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와 전투력이 부족한 상황과 침투징후를 식별할 능력이 구비되지 않은 취약점을 기회로 삼아 대남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분석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아군의 적절한 대응으로 적의 도발 의도를 분쇄하였고 국민의 안보의식 제고와 북한의 비정규전에 대비를 위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나)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은 1968년 1월 23일 미 해군 정보수집 보조함이 북한 해안에서 40km 떨어진 공해상을 지나던 중 원산항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북한군은 1·21사태가 실패로 돌아가자 새로운 군사도발을 통해 동북아에서 긴장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국이 월남전에 깊이 개입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미국 내에서 반전 사상이 극에 달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미군에 대한 도발을 감행하였던 것이다. 푸에블로호 납북사건도 1·21사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무력적화통일을 시도하면서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을 견제하려는 당면목표와 외국인의 한국투자 의욕상실 등 경제발전의 저해라는 장기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1968년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에 걸쳐 울진·삼척 지구에 북한군 무장공비 120명이 침투한 사건이다. 정세와 상황적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1·21 청와대 기습 실패로 북한 군부가 의기소침해 있던 차에 김일성이 196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창건 20주년 기념식에서 “남한 혁명은 주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며, 이 주권 쟁취 방법은 무력만이 있을 뿐”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김일성이 직접 지시된 대남 침투도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의 대남적화혁명 강조에 고무된 북한의 강경파들은 남한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게릴라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하조직과 불순 세력을 선동, 민중봉기를 획책해 재침 구실과 기회를 모색하고자 광 분했다. 그리고 무자비한 테러와 파괴 활동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 하고 전·후방 동시 전장화라는 전술을 구사하여, 우리 군·경부대의 전투력 분산과 피로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도하였다. 우리는 군경과 예비군을 투입 본격적인 토벌작전에 착수하여 12월 28일까지 약 2 개월간 작전을 하였다. 작전결과 공비 113명을 사살하고 7명을 생 포하여 침투한 120명 모두를 소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탕작전 을 실시하면서 국군과 경찰, 일반인 등 20여 명이 희생당했다. 울 진·삼척 무장공비 침투는 북한의 대남적화공작이 강경파에 의해 주 도된 이래 본격적인 게릴라 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지하조직 및 불순세력의 선동으로 민중봉기를 획책하여 전쟁도발의 구실을 모색 하고 지하조직의 사기진작과 직·간접 지원으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 한 국가차원의 도발이었다.

다. 1970년대 북한의 침투도발

1) 1970년대 침투도발 현황과 전개양상

북한은 1970년대에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하여 끊임없이 무장공비 와 간첩침투를 감행하였다. 1971년부터 1980년까지 북한의 대남침 투는 확인된 것 만해도 <표 6>과 같이 총 190회이다.

<표 6> 연도별 유형별 침투도발 현황

구분	계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계	190	49	20	20	23	28	8	9	13	5	15
지상	57	22	7	1	5	3	1	3	3	3	9
해상 해안	132	27	13	19	18	24	7	6	10	2	6
공중	1					1					

북한의 침투도발사례를 연도별로는 <표 6>에서와 같이 1971년에 49회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1960년대에 들어와 남한 내에서 ‘5·16군사혁명’에 의한 반공정부가 들어서서 ‘경제개혁 5개년계획’을 추진하는 등 사회가 더욱 굳건해져 가고 월남전에 파병하며 전투경험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계기로 작용하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도 월남에 참전할 것을 월맹에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자 남한이 더욱 발전하여 강해지기 전에 공산화 통일을 이루는 호기를 조성하고자 ‘대남폭력도발위주의 혁명전술’을 사용했다. 1970년대 북한은 침투기도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은밀한 침투를 위한 침투전술을 더욱 발전시켰다. 특히, 해상침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침투장비를 개량하고 발전시켰으며, 간첩선의 모선으로부터 해안에 침투시 사용하는 장비는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고 고속으로 도주가 가능하도록 소형보트형 자선이나 반잠수정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해안에 상륙시 초병의 눈을 피해 신속하고 은밀하게 접안할 수 있는 수중잠행보트(수중추진기)로 침투하였다. <표 7>은 197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이다.

<표 7> 197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해군 방송선 피랍사건(1970.6.5.)	박정희 저격 미수 사건(1974.8.15.)
현충문 폭파 미수 사건(1970.6.22.)	1호 남침용 땅굴 발견(1974.11.5. 발견)
대한항공 F-27기 납북미수(1971.1.23.)	헨더슨 소령 사건(1975.6.30.)
소흑산도 근해 간첩선 격침(1971.6.1.)	8.18 도끼만행(1976.8.18.)
철원군 DMZ 총격(1973.3.7.)	광천지구 무장간첩 침투(1978.11.4.)
추자도 무장공비 침투사건(1974.5.20.)	최은희 신상옥 납치사건
해경 863경비함 격침 사건(1974.6.28.)	(1978.1.14., 1978.7.19. 순차적 납치)

2) 197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가) 판문점 도끼만행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은 1976년 8월 18일 오전 10시경 미군장교 2명과 사병 4명, 한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 등 11명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UN군 측 초소의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치는 한국인 노무자 5명의 작업을 감독·경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었다. 당시 UN군으로서 미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2개 초소와 비무장지대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 3개 초소에 둘러싸인 유엔군 초소 부근에 약 12m에 이르는 미루나무 가지가 무성하여 이를 제대로 관측할 수 없었고, 북한군에 의한 미군의 납치를 우려하여 이날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한 것이다. 이때 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지켜보던 북한군 장교 2명과 15명의 하전사가 나타나 작업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자 11시경 수십 명의 북한군 병력들이 트럭을 타고 달려와서, 몽둥이와 UN군 측 노무자들이 나무 밑에 두었던 도끼 등을 휘두르며 기습적으로 공격하였다. 이들은 UN군 측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집중공격을 가해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미군 대위와 소대장 바레트 미군 중위가 현장에서 피살되었고, 미군 사병 4명, 한국군 장교와 사병 4명 등이 중경상을 입었다. 아울러 UN군 측 트럭 3대가 파손되었다. 정전협정 조인 이후 23년 만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나) 경남 남해도 침투도발

1980년 12월 1일 경남 남해도 상주리 금포부락 해안으로 수중잠행보트를 이용하여 침투 중인 공비 3명을 매복 중인 아군이 발견하여 2명은 현장에서 사살하였고, 도주한 1명은 12월 6일 대침투작전에

의해 사살하였다. 이때 공비들이 침투에 사용한 간첩선(자선)은 해군에서 남해도 동남방 약 80km까지 추격하여 12월 2일 06:59에 격침시켰다. 남해도 침투는 무장공비들이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간첩과 접선 및 대동복귀를 목적으로 침투하였다. 국군은 이 작전결과 북한 간첩선 1척을 격침시켰고 침투인원 9명(안내조 3명, 선박조 6명)을 모두 사살하였으나 도주공비의 소탕작전간 아군도 전사 3명, 부상 3명의 피해를 입었다. <표 8>은 남해도 대침투작전시 주요 노획품이다.

<표 8> 남해도 대침투작전시 주요 노획품¹⁴⁾

구분	주요 노획품
무기류 (14종 482점)	체코제 기관단총 3정(탄창 11개, 실탄 394발, 탄피 45발), 권총 2정(탄창 4), 수류탄 5발, 신호탄 2발, 단도 2개 등
통신장비/문건 (15종 86점)	무전기, 송신기, 수신기, 워키토키, 암호표, 난수표 등
침투장비 (20종 42점)	수중잠행보트(보트, 연료탱크, 엔진, 스크루, 나침반), 오리발, 수경, 나침의, 수중시계, 구명대, 방수복 등
피복/기타 (24종 78점)	전투복, 동내의, 통일화, 신사복, 물주머니, 양말, 우의, 소금, 미숫가루, 성냥, 연필, 의약품세트 등

다) 땅굴 침투 도발 사례

땅굴침투 도발은 <표 9>에서와 같이 소형땅굴은 1968년도 초에 시작하여 1970년도에 2회가 시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형땅굴의 규모는 지하 1~2m에 폭이 0.8~1m, 높이가 0.7~0.8m에 불과하였으며, 1개 분대의 소규모 병력으로 구축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북한이 전 전선에서 소형땅굴을 구축하여 침투하려던 기도는 아군에게 조기에 발견되어 실패하였다. 그러자 북한은 철책 부근에서의

14) 육군본부, 『간첩침투사건편람』, 1997, 368쪽.

소형땅굴 구축을 포기하고 그 대신 보다 원거리인 북한지역에서부터 대규모의 땅굴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1970년대 중반부터 발견되기 시작한 남침용 땅굴이다. 남침용 땅굴은 1974년 11월 발견된 서부전선 고랑포 제1땅굴과 1975년 3월 철원 북방 제2땅굴, 1978년 10월 판문점 제3땅굴, 1990년 3월 양구 제4땅굴이 있다. 이때 구축된 고랑포 제1땅굴은 시간당 1개 연대 병력이 침투할 수 있는 수준이며, 철원북방 제2땅굴과 판문점 제3땅굴은 높이와 폭이 각각 2m에 달하는 대형 터널수준으로 시간당 약 3만여 명의 병력과 야포까지 침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표 9〉 북한의 철책침투용 및 남침용 땅굴 현황

구분	계	'68	'70	'71	'74	'75	'78	'90
계	10	1	2	3	1	1	1	1
지역		파주	양구, 철원	연천, 인제, 고성	고랑포	철원	판문점	양구
비고		철책침투용 소형땅굴			남침용 땅굴			

라. 1980년대 북한의 침투도발

1) 1980년대 침투도발 현황과 전개양상

북한은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한 내에 ‘민주화 운동’이 거세지고 학원소요 등의 정국불안이 가중되자 침투도발과 민주화세력 및 운동권을 대상으로 남한 내 혁명을 유도하는데 주안을 둔 대남공작을 펼쳤다. 특히 기간 중에 북한은 남한에 대한 혼란 조성과 올림픽과 같은 국제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및 ‘KAL-858기 폭파사건’과 같은 무자비한 테러를 자행하였고, 한편으로는 군사정찰과 동조자 포섭 및 지하당구축을 위한 침투활동을 계속하였다. 80년대 초에는 전방지역인 필승교, 임월교, 저진 해안

등 군사분계선을 통한 무장공비의 직접침투를 시도하였고, 80년대 중반에는 다대포, 청사포 등 남해안을 통한 원거리 우회침투를 기도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에는 한국의 국제적 행사인 아시안게임과 올림픽 개최로 인한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어 있음을 의식한 듯 침투활동을 다소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에 북한은 대남공작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당 예하 조직으로 대남사업담당 비서 통제 하에 대외연락부와 연락부, 작전부의 3개 부서를 두고 공작을 전담시켰다.

1980년대 북한이 침투도발이 확인된 것은 <표 10>에서와 같이 총 25회이다. 이 중에서 18회는 우리가 침투도발 당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적이 침투한 이후에 생포간첩이나 기타 경로를 통하여 침투도발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횟수이다. 그런데 <표 10>과 같이 1980년대에는 1970년대에 비하여 침투도발 횟수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계속된 침투도발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아군의 전력보강이나 감시장비의 성능향상, 경계시설물 보강 등으로 침투도발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표 10> 1970년대와 1980년대 적 침투도발 사례 비교

구분	계	육상침투	강안침투	해상침투
계	217(158)	30(9)	23(13)	164(136)
1970년대	192(140)	29(8)	17(9)	146(123)
1980년대	25(18)	1(1)	6(4)	18(13)

1980년대에 북한은 육상을 통한 침투도발보다는 강안이나 해상으로 침투도발 증가하였고, 무장공비에 의한 직접적인 파괴나 양민학살 등은 감소되었다. 해상침투전술은 간첩선을 이용하여 해안이나 도서지역에 직접 접근하지 않고 모선에서 자선을 분리하여 침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즉, 간첩선(모선)을 이용하여 공해상으로 멀리 우회한 다음, 모선에 적재하였던 자선을 이용하여 근해로 침투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시기에 해상침투전술 중에서 또 하나의 특이할 만한 사항은 소형 쾌속선박을 이용한 서해안지역 당야침투 및 복귀전술을 사용한 것이다. <표 11>은 198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이다.

<표 11> 198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 필승교 무장공비 침투(1981.6.29.)	-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1983.10.9.)
- SR-71 정찰기 피격(1981.8.26.)	- 다대포 무장공비 침투(1983.12.3.)
- 저진해안 무장공비 침투(1982.5.15.)	- 청사포 간첩선 격침(1985.10.19.)
- 임월교 무장공비 침투(1983.6.19.)	- 김포국제공항 폭탄테러(1986.9.14.)
- 월성해안 무장공비 침투(1983.8.4.)	- 대한항공 858편 폭파(1987.11.29.)
- 독도 근해 간첩선 격침(1983.8.13.)	

2) 198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가) 미얀마(버마) 아웅산 묘소 폭파사건

1983년 10월 9일 미얀마를 방문 중이던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암살을 노린 폭탄 테러가 아웅산 묘소에서 발생했다. 북한 비밀공작 요원들은 전두환 대통령을 살해하여 남한 정부를 혼란에 빠뜨릴 목적으로 미얀마 아웅산 묘소에 고성능 폭약을 설치·폭파하여 집단 암살을 기도했던 것이다. 이 폭발테러로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장관 등 17명이 순직하고 15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버마인 4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 후 동남아 순방의 첫 방문지를 미얀마로 선택했다. 미얀마는 제3세계 국가였지만 북한 및 공산권과 가까운 나라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제3세계와의 교류를 증대하려고 했고, 그 중 미얀마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곳을 먼저 방문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지득한

북한 당국은 전두환 대통령 일행이 아웅산 묘소를 참배할 때 미리 설치한 폭발물을 원격조정 장치로 폭발시켜 일거에 대통령 일행을 모두 살해한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나) 대한항공 858 폭파

대한항공(KAL) 폭파사건은 1987년 11월 29일 바그다드에서 서울로 가던 KAL 858편 보잉 747기가 미얀마 근해에서 북한공작원에 의해 공중 폭파되어 이라크에서 귀국하는 근로자 80여 명을 포함, 115명 전원이 희생된 사건이다. 수사결과 KAL기는 하치야 신이치와 하치야 마유미라는 일본인으로 위장한 북한 대남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김정일의 친필지령을 받고 기내에 두고 내린 시한 폭탄과 술로 위장한 액체폭발물(PLX)에 의해 폭파되었음이 밝혀졌다. 이 대남테러 사건의 목적은 북한의 노동당 최고지도부의 지령에 의해 직접적으로 88서울 올림픽의 개최를 저지, 방해하고, 한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사회, 정치적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되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마. 1990년대 북한의 침투도발

1) 1990년대 침투도발 현황과 전개양상

이 시기에 북한은 겉으로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추진하면서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정전체제를 무력화하기 위해 중립국 감시위원회 대표단을 철수시키면서 5회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10회의 북방한계선(NLL) 침범 등의 군사적 도발행위를 계속하였다. 특히 1996년 9월 13일~9월 15일까지 ‘나진·선봉지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선전하면서 1996년 9월 18일 강릉지역에 잠수함을 침투시키는 등 해상을 통한 침투도발을 계속하였다. 또한 1999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연평도 해상에서는 북한

경비정들이 NLL을 수차례 침범하여 결국 6월 15일에는 ‘1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다. 이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에도 서해상 NLL 침범, 잠수함(정)을 이용한 해상침투로 개척과 군사정찰 활동 등의 대남도발과 동조자 포섭 및 지하당 구축을 대남공작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91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의 침투도발로 확인된 것은 <표 12>와 같이 총 36회이다. 이 중 29회는 우리가 침투당시에 발견하지 못했으나 적이 침투한 이후 생포간첩이나 기타 경로를 통하여 침투 사실을 인지한 횟수이다.

<표 12> 1980년대와 1990년대 침투도발 사례 비교

구분	계	육상 침투	강안 침투	해상 침투
계	61(47)	5(4)	9(6)	47(37)
1980년대	25(18)	1(1)	6(4)	18(13)
1990년대	36(29)	4(3)	3(2)	29(24)

※ ()안의 숫자는 간첩침투 이후 사후에 인지된 것임

1990년대에는 1980년대에 비하여 침투횟수가 오히려 11회나 늘어난 것을 볼수 있다. 이는 북한이 80년대 말에 ‘서울올림픽’ 등 한국의 국제행사를 통한 국제적 이목 집중을 고려하여 침투를 다소 자제했던 때문으로 보인다. 침투전술면에서는 북한은 80년대와 같이 육상과 강안침투보다는 주로 해상침투를 많이 전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90년대 들어와서 특이한 것은 동해안지역에서 잠수함(정)을 이용한 침투도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북한은 아군이 탐지하기 어려운 잠수함(정)을 전력화하여 90년대 이후 동해안 침투로 개척과 군사정찰에 적극 활용하였으며, 침투도발 횟수도 사후인 지된 것을 포함하여 총 10회에 이른다. 또한 서해안 강화도지역에 대한 당야침투전술도 90년대에 4회에 이르렀다. <표 13>은 199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이다.

〈표 13〉 199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DMZ은하계곡무장공비침투(1992.5.22.)	최정남, 강연정 부부간첩사건(1997.10.)
임진강 무장공비 침투사건(1995.10.17.)	속초 앞바다 무장공비 침투(1998.6.22.)
부여 간첩 사건(1995.10.24.)	동해 무장공비 사체 발견(1998.7.12.)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1996.9.18.)	강화도 간첩선 침투 사건(1998.11.19.)
철원 GP교전(1997.7.16.)	여수해안 간첩선 격침(1998.12.17.)
	제1연평해전(1999.6.15.)

2) 1990년대 주요 침투도발 사례

가) 강릉 잠수함 무장공비 침투 사건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1996년 9월 18일 00:55경 강릉시 강동면 동해 7번 도로상에서 택시기사가 거동수상자 2명과 해안가에 좌초된 선박 1척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군인·경찰·예비군은 합동으로 무장공비에 대한 소탕작전을 전개한 사례이다. 소탕작전 중 잠수함과 도주로 주변에서 중화기인 대전차 로켓을 비롯하여 M-16·AK소총·정찰용 지도 등 유류품 367종 4,380점을 노획하고 조타수 이광수(31세, 상위)를 생포하였으며, 동승했던 정찰조원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잠수함 좌초책임을 물어 사살한 것으로 추정되는 승조원 11명의 사체를 발견하였다. 도주한 잔당을 추적한 끝에 정찰조장·잠수함장 등 13명을 발견하여 교전 끝에 사살하였으나 아군 11명, 경찰·예비군 2명, 민간인 4명이 피살되었다.

생포된 이광수에 의하면, 이들은 북한의 대남공작기구 중 하나인 인민무력부 정찰국 해상처 22전대 소속으로 1994년 12월 함남 신포에서 건조된 300톤급 잠수함을 타고 총 26명이 침투하여 강릉비행장·영동발전소 등을 정밀 촬영하였으며, 침투 임무는 전쟁에 대비하여 한국의 군사시설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강원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을 암살하려는 것이었다. 결국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은 북한 김정일의 직접적인 지령에 따라

남침계획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해 사전정찰 및 국내혼란 조성을 목적으로 감행되었다고 분석된다.

나) 제1연평해전

제1연평해전은 1999년 6월 15일 연평도 서남방 8NM(15km), 북방한계선(NLL) 남방 4.3NM(8km) 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의 기습적인 선제사격에 대해 우리 해군 경비함정이 대응사격을 실시한 해전이다. 6월 7일부터 15일까지 다수의 북한 경비정과 어선들이 연평도 서남방에서 북방한계선을 여러 차례 침범하였고, 우리 해군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소위 밀어내기식 작전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6월 15일 9시 28분 북한 경비정이 선제사격을 가해왔고, 우리 해군 함정들이 즉각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이를 격퇴하였다. 이 해전에 우리 해군의 참가전력은 고속정 8척, 초계함 2척이었으며, 북한 해군은 경비정 4척, 어뢰정 3척이었다. 작전 결과 북한 해군은 어뢰정 1척 격침, 경비정 4척과 어뢰정 1척 손상, 다수의 사상자 발생 등 큰 피해를 입고 북방한계선 이북으로 도주하였다. 우리 해군은 고속정 5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고, 9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하였다. 제1연평해전에서의 밀어내기식 작전은 피아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작전 의도가 있었지만 그러한 작전지침을 내린 상급부서 및 지휘관에게 많은 비판이 있었다.

바. 2000년대 이후 침투도발

1) 2000년대 이후의 침투도발 현황과 전개양상

2000년도부터 2013년 현재까지 북한의 침투도발 확인된 것은 <표 14>와 같이 총 90회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아 영해 및 영토에 직접적인 화력도발을 감행하였던 사건으로 그 강도와 방법 면에서 과거의 침투도발과는 다른 새로운 유형이었다.

〈표 14〉 2000년도 이후 침투도발 내용별 현황

계	육·해상 침투	MDL 침범	총격 도발	DMZ 습격	NLL 침범	해상 교전	해상 납치	영공 침범	납치 폭파	직접 도발
90	·	4	7	·	73	3	·	1	·	2

〈표 15〉 2000년대 이후 주요 침투도발 사례

2002. 6.29. NLL 침범, 2차 연평해전	2009. 5.25. 2차 핵실험
2004.10.26. 연천군 GOP 철책선 침투	2009.11.10. 대청해전
2005. 2.10. 핵무기 보유 선언	2010. 3.26. 천안함 피격사건
2006. 7. 5.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	2010.11.23. 연평도 포격도발
2006.10. 9. 제1차 핵실험 강행(2002.6.2)	2012. 4. 광명성 3호 발사
2008. 7.11.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망	2013. 2.12. 3차 핵실험
2009. 4. 광명성 2호 발사	

〈표 15〉는 2000년대 이후 주요 침투도발 사례이며, 〈표 16〉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과 2010 이후의 침투도발 양상의 변화내용이다.

〈표 16〉 2010년대 전·후 국지도발 비교 분석

구분	2010년 이전	2010년 이후
상황	남·북 경쟁/상대적 우위	남한의 절대 우위
목적/의도	대남공작, 남한 위상 훼손	대남/대내외 정세전환/여건조성
목표/대상	포섭대상/중요시설/VIP	특정표적/효과 극대화 대상
징후/시기	징후 없음/위장평화로 방심/ 침투 성공 시점(아 취약시기)	징후암시/기습/남한상황연계 (도발 주체 기만/후유증 최소화)
수단/방법	간첩/공비/테러리스트/ 은밀/특수요원위주	아 사전 대비/대응 곤란, 취약점 고려 이외의 수단/차원 기습
강도/수준	저강도/전술적(침투도발)	고강도(예상치 못한 수준)/공격
공통점	국가전략목표달성의 방법, 도발 전·후 위장평화/책임전가, 도발주체 은폐/대남 전략 연계, 아 대비 및 대응의 곤란과 취약점 활용 도발	
결과	성공	직접타격으로 기습/효과 극대화
	실패	아군의 대비강화 기회제공 전략적 목표/목적 달성 실패

수단과 침투방법에서도 1980년 이전은 주로 지상은밀침투였고, 1990년대 이후는 해상은밀침투와 우회 침투하는 방법이었다. 특히 지상침투는 1995년 1사단 침투, 해상은 1998년 여수 반잠수정 침투 이후 징후가 미식별되고 있다. 임무는 고정간첩 접선, 공작원 대동 복귀, 중요시설 정찰, 남한 내 통일전선 형성을 하였거나 아웅산 테러(대통령 암살)와 KAL 폭파(88올림픽 방해 등)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2010년대 이전의 북한의 침투도발은 사전 징후 없이 지·해상으로 야간 취약시간을 이용하여 공작원을 은밀침투하거나 우회침투 후 공작 및 테러와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양상이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농협전산망 사이버 공격이나 GPS 전자전 공격 등에서 보듯이 이외의 수단 및 방법으로 기습적 도발형태로 변화되었다. 즉 침투 단계 없이 직접적으로 서해 5도와 아 함정에 타격하는 방법이었으며, 사전에 징후를 암시 혹은 은폐하여 전략적 기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대내외 상황과 연계된 도발을 하였고, 국가급 지시에 의해 도발계획 수립 후 상황도래시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도발의 원인 및 주체 식별의 곤란한 수단과 방법으로 도발하였고, 도발 수준도 무차별 국지전 수준으로 증강되었고, 전략적 심리전과 사이버 및 전자전 등 비물리적 도발로 국가기반 시설 무력화와 혼란을 조성하기도 하였다.

2) 2000년대 이후 주요 도발 사례

가) 2002년 제2연평해전

제2연평해전은 제17회 월드컵축구대회의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무렵,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1999년 6월 15일 오전에 발생한 제1연평해전이 벌어진지 3년 만에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남북한 함정 사이의 해전이다. ‘서해교전’으로 불리다가 2008년 4월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되었다. 제2연평해전은 북한경비정 2척이 남한 측 북방한계선을 침범을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다. 즉 계속 우리의 영해로 침범한 북한경비정을 우리 해군의 고속정 4척이 즉각 대응에 나서 퇴거 경고 방송을 하는 순간 아무런 징후도 없이 북한 경비정이 선제기습포격을 가해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조타실이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이때부터 양측 함정 사이에 교전이 시작되고, 곧바로 인근해역에 있던 해군 고속정과 초계정들이 교전에 합류하였다. 이어 10시 43분경 북한 경비정 1척에서 화염이 발생하자 나머지 1척과 함께 퇴각하기 시작해, 10시 50분경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상함으로써 교전은 25분 만에 끝이 났다.

이 교전으로 한국 해군 운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형 병장 등 장병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당했고, 해군 고속정 참수리호 357호가 침몰하였다. 한편 북한군 30여 명의 사상자와 SO-1급 초계정(등산곶 684호)가 반파된 채로 퇴각하였다. 교전 직후 국방부는 ‘북한의 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며,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로 규정하고 북한 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북한은 반응하지 않았다.

나) 천안함 폭침

천안함 폭침 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우리 해군 PCC-772 천안함이 북한해군의 어뢰공격으로 인해 피침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우리 해군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우리 정부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규명할 민간·군인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에 “천안함이 북한 해군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조사단은 발표문에서 “천안함은 어뢰에 의한 수중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되었으며 가스터빈실 중앙으로부터 좌현 3m, 수심 6~9m에서 폭발하였고, 무기체계는 북한에서 제조한 고성능폭약 250kg 규모의 어뢰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해역의 작전환경을 고려할 때 소형잠수함정으로 판단되며 주변국의 잠수함정은 모두 자국의 모기지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해의 북한 해군기지에서 운용되던 일부 소형잠수함정과 이를 지원하는 모선이 천안함 공격 2~3일 전에 서해 한 해군기지를 이탈하였다가 천안함 공격 2~3일 후에 기지로 복귀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폭발지역 인근에서 수거된 어뢰의 부품들이 북한군 해군 무기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사 결과 발표는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외에 인도 등 비동맹국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조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발표하고 북한측 주장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써 북한은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 해상교통로 이용을 불가하게 하고 남북간 교역을 중단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과 관련 있는 일이 아니라고 강력히 부인하였고, 일부 남한의 중북세력들은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부화뇌동하면서 북한소행을 부인하고 남남갈등 조장 및 대적경계심을 이완시켰다. 천안함 피침사건은 북한의 대내외 상황이 악화되고, 남한의 대북강경 정책과 현재의 한반도 구도에 대한 상황전환을 위해 한미 독수리훈련의 기회를 이용하여 최고권부의 지시로 기습 도발한 사건이라고 분석된다.

다) 2010년, 연평도 포격

(1) 연평도 포격도발 경과

2010년 11월 23일 우리 군이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서해 남쪽에서 실시하던 중 북한이 연평도 군부대 및 인근 민가에 포격을 했다. 북한은 당일 오전에 우리 군이 육·해·공 연합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자국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중단을 요청하는 전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연례적인 훈련일 뿐이라며 요청을 거절하고 예정대로 훈련을 진행하였다. 이후 오후 2시 30분경(훈련종료 1시간 정도 경과 후) 북한이 76.2mm평사포, 122mm 방사포, 130mm 대구경포로 연평도 해병대 및 민가지역을 향해 북한 개머리 해안부근 해안포 기지에서 포격을 시작하였다. 적 포격 13분 후에 우리 군의 K-9자주포는 무도 진지에 50발, 개머리 포진지에 30발 등 총 80여 발을 사격하였다. 북한은 오후 3시 41분까지 약 170발을 공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 시간 정도 교전이 지속되는 동안 한국은 KF-16기 2대와 F-15K 4대를 긴급 출격하였으나 적의 도발이 계속되지 않아 실제 타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백령도를 향한 북한군 해안포 기지에서 입구 개방이 확인되기도 하였으나 공격은 하지 않았다.

(2) 피해 현황

북한군의 포격으로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 2명과 해병대원 2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3명과 해병대원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인명 피해 외에도 연평도 내연발전소, 고압변전기가 파괴됐고 주택 21채가 불에 탔으며, 산불도 10곳 이상에서 발생했다.

(3) 북한의 연평도 포격 원인 및 의도 분석

연평도 포격은 6·25 이후 처음으로 민간지역까지 직접 포격을

했다는 점에서 과거 어떤 도발보다 심각한 도발이었다. 연평도 포격 도발은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고 서해 5도 지역을 분쟁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의도와 대내외 상황악화, 천안함 피침사건 이후 한미동맹 강화와 대북강경정책에 대응하고 후계자 김정은의 권력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여건조성 등 다음과 같은 의도에서 도발했다고 분석할 수 있다.

첫째는 김정은 후계체제의 조기 구축을 위한 것으로 후계구축 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존재와 리더십을 과시함과 동시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 유도 차원에서 군부에 힘을 실어주고, 주민들의 불만을 가라앉혀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대화국면을 유도하였으나 실패하면서 좀 더 강한 도발로써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전략으로도 분석된다.

둘째는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고립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을 겨냥한 도발이라고 할 수 있으며, 호국훈련에 대한 대응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과 북방한계선(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셋째는 포격 지역을 연평도로 선정한 이유는 서해 NLL은 북한이 보유한 해안포에서 공격하기에 적당한 지역이고 파급력도 크다는 점과 육지에 비해 확산 가능성이 적다는 점도 고려되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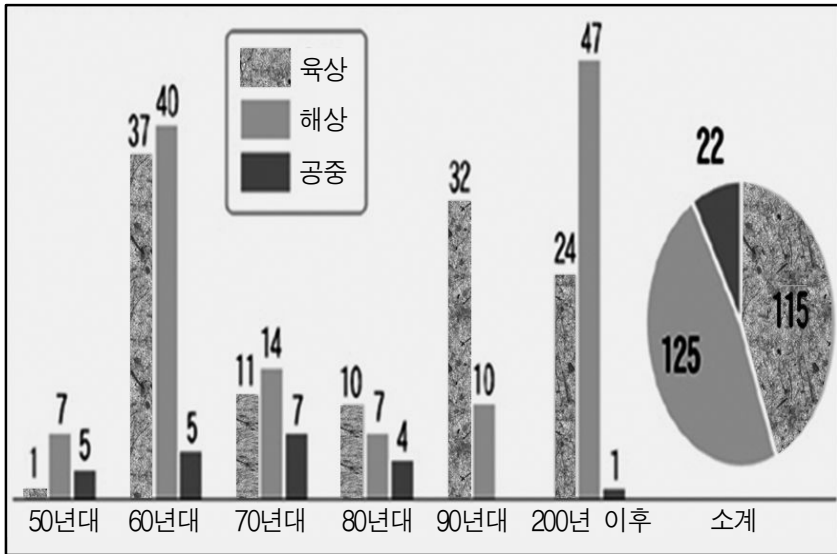
4.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분석

가.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 변화추이

남북한은 정전협정서에 일체의 무력도발과 정전협정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대남적화

유리한 여건조성을 위해 시공간을 초월하여 대남 침투도발을 감행하여 왔다. 특히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화해협력시대가 열렸다고 대내외 과시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의 교류협력이 전개되는 시기에도 서해교전을 유발하였고, 2010년도에는 불리한 대내외 정세를 전환하기 위해 천안함 피침과 연평도 포격까지 감행하였다.

〈그림 2〉 정전이후 주요 대남 침투도발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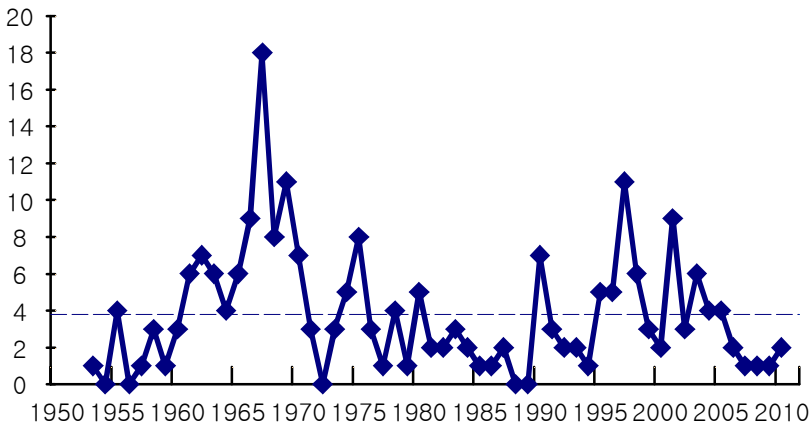


※ 출처 : 합동참모대학, “국지도발 대비작전 합동성 제고방안” 세미나, 2010.7.

〈그림 3〉은 북한이 6·25전쟁이후 정전협정위반사례를 포함한 주요 침투도발의 변화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시기별로 분석해 보면 196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침투도발이 격화되었으며, 1960년에서 1971년까지 총 88건, 연평균 7.33건으로 가장 많은 침투도발이 있었다. 이 기간 중 발생했던 주요 침투도발은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기습사건과 1월 23일 美 해군 푸에블로호 납치, 11월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1969년 4월에 美 공군 EC-121 정찰기 격추

사건 등이다. 이후 남북회담이 일시적으로 전개되었던 1970년대 초반에 침투도발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고, 1970년 중반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을 기점으로 대남 침투도발은 줄었지만 새로운 침투도발 수단으로 남침용 땅굴을 구축하여 남침여건 조성에 주력했다고 분석된다. 1980년대에도 버마 아웅산 테러나 대한항공 858편 공중테러와 같은 도발은 있었지만 전반적인 침투도발은 전체 평균보다 감소하였다. 탈냉전이 시작되는 1990년대를 들어서면서 급격한 상승을 보여왔으며,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관되게 침투도발이 지속되었으며, 2010년도에는 국군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공격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였다. 특히 2000년도 이후 NLL침범과 서해 5도에 대한 침투 도발이 빈번하였다. 이는 국제사회에 NLL 이슈화와 무효화, 한반도에 대한 정세주도권 장악,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 북한내부의 어려운 상황의 관심 전환과 국면타개 등 전략적 의도가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북한의 연대별 주요 대남 침투도발 변화추이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연도별 주요 대남 침투도발 변화 추이



※ 출처 : <http://www.songyoungsun.com>, 검색일 : 2012.10.10.

정전협정 체결이후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횟수는 도발의 기준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 : UNC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¹⁵⁾와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합동참모본부의 통계상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서 파악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는 총 42만여 건이며, 이 중 주요 정전협정 위반 및 침투도발사례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262회로 산정하고 있다. 반면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주요 침투도발 횟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총 2,660회와 2,720회로 파악하고 있다.¹⁶⁾ 이와 같이 대남 침투도발과 관련된 통계자료가 관련 기관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관별 침투도발과 관련된 개념이나 정의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전협정에 근거한 유엔사 군정위 통계자료를 인용하였으며, 앞장에서 연대별 주요 침투도발사례로 예시한 것은 유엔사 군정위 통계자료 262건 중 무장공비 침투, 테러, 미군에 대한 도발 등 한반도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남북한 긴장과 갈등이 높았던 사례들이다.

나. 침투도발 유형별 수단방법

북한의 정전이후 주요 대남도발 2,720여 건 중 유형별로는 <표 17>과 같이 분석되고 있다.¹⁷⁾

<표 17> 주요 대남도발 유형별 현황

구분	총계	육상	해상	공중	기타
계	2,720 여건	1,190 여건	1,431건	43 건	56 여건

15) 1953년 7월 27일 이후 정전협정체제를 운영 및 유지하는 실질적 기구로서 남·북간 유일한 군사문제 협의 창구 역할을 하였다.

16) 합동참모본부, 『북한 대남 침투 및 도발 사례집』, 합참 정보본부, 2011. 4~5쪽.

17) 국방부, 『2010국방백서』와 육군본부 군사문제연구소, 『대침투작전사 시리즈』를 토대로 분석하였음.

침투도발 유형별 수단 및 방법은 <표 18>과 같이 ①항공기의 피랍 및 격추, ②함정 및 어선의 피랍 및 격침, ③지상 간첩 또는 무장공비의 침투, ④해상 간첩 및 무장공비 침투, ⑤NLL월선 및 무력 충돌, ⑥화력에 의한 도발, ⑦인명살상 및 시설 폭파 등의 테러, ⑧기타 땅굴침투를 위한 굴설과 무력시위 등이며 침투도발 양상은 다음과 같다.

<표 18> 주요 침투도발 유형별 수단방법

수단/방법		건 수	내 용
항공기피랍 및 격추		43	KNA 여객기 피랍('58.2월), 공군 F-86D 월선/격추('64.1월) 미 EC-121 정찰 중 격추('76.4월) 미 CH-47 월선/격추('77.7월), KAL858기 폭파('87.11월) 등
함정(어선)피랍 및 격침		8	미 푸에블로호 피랍('68.1월), 당포함 격침('69.1월), 동건호 피랍('87.1월), 제37·38태양호 피랍('89.1월) 천안함 격침('10.3월) 등
간첩 (무장 공비) 침투	지상	1,027	청와대 기습 미수 ('68.1월), 대성동 주민피랍('97.10월), MDL/임진강 등 지상침투, GP/판문점 미군에 도발 등
	해상	1,011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68.10월), 다대포 간첩침투('83.12월) 제주 온평리 간첩침투('95.9월), 다대포 잠수함침투('96.9월) 제주 갈곳리 간첩침투('97.8월), 양양 잠수함 침투('98.6월), 강화도 쾌속선 침투('98.11월), 여수 반잠수정 침투('98.12월) 등
NLL월선 및 해전		414	제1연평해전('99.6월), 제2연평해전('02.6월) 대청해전('09.11월) 등
화력도발		92	연평도 화력 도발('10.11월), GP총/포격 등
테러		10	테러 :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70.6월), 판문점 도끼만행('76.8월), 김포공항 입국장 폭파('86.9월), 8·15광복절 기념식 저격('74.8월), 아웅산 테러('83.10월) 등
기타		125	땅굴 발견(4회 : '74.11월, '75.3월, '78.10월, '90.3월) 미사일 발사 등

첫째, 항공기와 함정, 어선의 피랍 및 격추(침)는 주로 북한의 영공이나 영해를 고의 또는 우발적으로 침범했을 때나 정찰 및 정보수집을 했을 때 감행되었지만 KAL 858 민항기의 폭파나 천안함의 피침 같은 경우에는 북한 영토의 침범과 관계없이 만행을 저질렀다.

둘째, 간첩이나 무장공비의 침투도발은 지상 및 해상으로 간첩 침투 및 복귀, 군사정찰을 하거나 울진·삼척의 경우처럼 대규모로 침투하여 국가적 행사를 방해하거나 남한사회 혼란, 대남적화혁명 여건을 조성하기도 하였으며 청와대를 기습하여 대한민국이 공황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셋째,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해로 우리 군의 경비정이 진입 시에 침범으로 간주하고 3차례에 걸쳐 해전을 일으켰다. 한편 우리 영해내로 잠수함(정)으로 은밀침투 도발하는 유형이다.

넷째, 테러는 대통령을 저격하려는 등의 요인 암살과 국립묘지와 김포공항 등 주요시설 폭파로 남한 내 불안을 조성하고 세계 여론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다섯째, 기타 전면전과 평시 은밀 침투를 위하여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전 전선에서 침투용 소형 땅굴 및 남침용 대형 땅굴을 굴설하였고 그 중 10개가 발견되었으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무장병력에 의한 시위도 있었다.

다. 북한의 연대별 침투도발 전개양상

북한의 대남도발은 시대적 대내외 정세를 연계되어 연대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첫째, 1960년대는 남한 및 미국에 대한 과감한 도발을 감행하였으며, 이는 냉전체제 완화 등 세계적인 동서화해무드 속에서 한반도 위기사태 발생 시 미국의 반응정도와 남한의 방어태세에 대한 강도를

확인하는 의도였으며, 북한의 군사력 수준 우위를 이용한 대남적화 무력통일 야욕을 달성할 목적이었다.

둘째, 1970년대는 중국의 UN가입 등 전 세계적으로 화해무드가 고조되고 있었고, 북한은 김정일의 세습체제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남한은 경제개발 추진 가속화와 동시에 유신정권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였던 시대적 배경에 의해 남·북 대화제의, 이산가족 상봉 등 화전양면전술을 병행하였다.

셋째, 1980년대에서는 미·중간 군사교류 재개 등 평화무드가 조성되었고, 북한은 김정일 세습체제 본격화되는 시기이고, 남한은 88서울올림픽 개최 등 국제적 위상 격상과 비약적 경제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웅산 폭파사건, KAL 858기 폭파사건 등 테러 공격과 어민과 어선 납치사건 등 비군사적 도발이 증폭되었다.

넷째, 1990년대는 공산권의 붕괴, 남·북한 동시 UN가입 등 냉전이 종식되고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식량난, 외교적 고립 심화, 남한의 햇볕정책 등 화해분위기 조성 등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국제적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수단과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한 군사력을 이용한 ‘벼랑끝 전술’을 구사하였고, 남한사회 혼란 조성을 위한 도발이 전개되었다.

다섯째, 2000년 이후는 남북정상회담과 남북한 화해무드 등을 이용한 NLL무력화를 위한 도발, 해킹 및 사이버 심리전 등을 통한 남한사회 혼란 조성, 체제불안과 대내외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관심 전환과 대북정책 변화를 강압하는 정치 전략적 도발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에는 북한의 3대 세습체제 진행,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대내외적인 가시적 성과 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남한의 대북강경정책과 중북세력 준동 등을 계기로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전통적인 침투, 테러리즘 도발에서 아군 및 영토에 대해 기습적이고 직접적인 타격을 감행하였다. 아울러 사이버 심리전,

전자전 공격, 간첩활동 지원 등 간접적인 도발도 전개하는 특징이 있었다.

라. 북한의 침투도발 전개양상 특징

북한의 과거 60년 동안 정전협정을 위반과 다양한 수단 방법으로 침투 및 도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식별할 수 있었다.

첫째, 도발 목적과 의도이다. 북한은 과거의 60년 동안 각종 군사적 비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 중 8·18도끼만행사건을 제외하고는 대남적화혁명전략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공작 및 군부의 최고기관의 지시에 의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의해 감행되었다.

둘째, 도발동기 및 시점이다. 북한의 침투도발은 사전에 능력과 준비에 관계없이 침투도발 목적과 동기가 도래되면 상황을 조성해서라도 언제라도 감행하였다. 침투도발의 동기와 시점은 북한의 대내외 상황 악화, 주민들의 체제 불만 증폭으로 관심 전환 필요시, 권력 세습의 유리한 여건 조성 및 권력세습체제 공고화를 위한 여건 조성 필요시, 남북한이 대내외적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격차가 심화되어 남한의 우월적 위상 훼손이 요구가 될 때, 그리고 남북한 및 미·북 협상에서 유리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중립 지원과 국제적 관심이 요구될 시점이었다고 식별되었다.

셋째, 국지도발의 수준 및 강도이다. 2010년도 이전의 도발과 테러는 주로 무장공비 침투 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수준이었고, 군사적 도발이었다. 하지만 2010년도 연평도 포격도발과 농협 전산망 해킹 등에서는 민간인 살상과 비군사적 영역까지 도발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앞으로도 북한은 군사적 및 비군사적 수단으로 민간영역이나 사회기반시설 등 구분 없이 도발의 대상이 될 것이다. 다만

그 수준과 강도면에서는 도발 목적과 의도를 달성하면서 전면전이나 한·미군이 선제공격할 수 있는 빌미는 회피하는 범위까지 한정될 것이다. 또한 국지도발로 인해 북한 내 급변사태로 비화되거나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중·러 지원 단절 상황 등 도발의 역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수준이내에서 도발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북한군의 국지도발 전략상 특징이다. 이는 ‘선(先) 감수할 위험, 후(後) 효과극대화, 차후(此後) 성공가능성, 최후(最後) 역대응’이라는 전략개념을 추구하고 있다. ‘선 감수할 위험 전략’이란 국지도발 수준과 강도를 우선 결정한 다음 침투도발 수준 및 강도 범위내에서 감행된다는 개념이다. ‘후 효과극대화 전략’이란 기습과 부수적 효과를 최대한 발생시켜 남한사회에 많은 피해와 후유증이 발생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정부나 군이 기습을 당해 대비 및 대응시스템이 마비되고, 도발주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은폐 및 기만하여 즉시적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남남갈등과 아 사회적 취약점이 악화되도록 하는 전략이다. ‘차후 성공가능성 전략’이란 도발의 성공여건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상황을 연계시키면서, 예기치 못한 수단방법으로 도발을 하고 심리전을 병행하여 지원세력까지 확보하여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는 것이다. ‘최후 역대응 전략’이란 아군의 조직적이며 즉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아 대응작전시는 군사 및 비군사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역대응하여 아 대응효과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도발이 실패했을 때를 고려하여 아 응징과 국제적 고립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침투 및 도발은 과거에는 군사분계선이나 해상을 통한 공작원의 직접침투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침투 및 습격, 총격도발 위주로 실시되어 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탈북자 및 밀입국자나 외국인 등을 가장한 우회침투와

사이버상의 공격,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 일대에서의 기습적인 무력 도발이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침투 및 도발행위는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우리가 예측하기 곤란한 새로운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적이고 기만적인 형태의 다양한 도발 스펙트럼으로 변화되고 있다.

5. 결론

북한은 6·25전쟁이후 대남적화혁명 목표달성을 위해 지상, 지하, 해상, 해저, 공중의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대남 침투 및 국지도발을 감행하여 왔으며,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첫 번째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그들은 필요에 따라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간을 선택하였으며, 지상, 해상, 공중, 국내, 해외를 불문하고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두 번째는 수단과 방법과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 즉 함정, 항공기, 포, 납치 폭파 등 다양한 수단 방법을 동원하였고, 대상도 국군과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아 국민과 최고지도자를 가리지 않았다. 세 번째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도발강도와 위협수준이 점증되었다. 최초에는 소수 특수공작원이나 간첩 등 소수 인원의 침투공작으로부터, 수십 명의 침투도발, 아 함정을 향한 공격, 우리 영토에 국민들을 향한 직접공격으로 도발강도가 점증되어 왔다. 네 번째는 도발을 은폐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위장평화공세와 긴장조성 등 ‘화전양면전술’을 전개되었다. 이처럼 북한의 침투 및 도발은 다양한 영역과 공간에서 우리가 예측하기 곤란한 새로운 수단과 방법으로 기습적이고 기만적인 형태의 다양한 도발 스펙트럼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침투도발시점과 전개양상을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침투도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복합적이고 북한내부의 상황 타개를 위한 생존전략에 의해 감행되고 있기에 그들의 내부 상황을 사전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은 핵과 미사일 위협, 서해 5도에 대한 타격 등 군사적 위협의 수준을 더욱 높여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킹, 전자전, 대남공작과 선전공작의 심리전 등 비군사분야의 위협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침투도발에 대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비태세가 요구된다.

첫째, 북한의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실체와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특히 위장평화전술과 병행하여 전개되는 대남 침투도발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침투도발시 확전(擴戰)을 감수하더라도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는 국가 및 군 지도자들의 결단성과 국민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단성과 의지는 사소한 위협과 침투도발에도 적용시킴으로서 북한도발자들이 인식하고 도발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심리전과 병행해서 전개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한 무력적화통일은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자주, 평화협정이라는 것을 내세워 미군철수를 획책하고 있다. 한미동맹체제는 불안정성이 고조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통제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승을 위한 필요 충분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유지시키고 한미 연합전력을 활용하여 대남도발의 억제력을 강화하고 전승 전력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과 3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제재를 강화한 것은 북한의 도발의지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험적인 행동에 일정분야 통제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위해 언제라도 8·18도끼만행 사건, 강릉 무장공비 침투, KAL기 폭파,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침투도발이 감행될 수 있다. 따라서 6·25전쟁이후 60년 동안 계속 되어 온 침투도발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면서 북한 세습독재체제의 생존전략의 실체를 간파하고 침투도발의도 및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여 선제적 대응과 대비태세를 강화하여야 한다.

(원고투고일 : 2014. 4. 1, 심사수정일 : 2014. 5. 14, 게재확정일 : 2014. 5. 20)

주제어 : 대남 도발, 침투, 침투도발, 국지도발, 무장공비, NLL도발, 정전 협정위반, 도발사례, 적화혁명, 침투도발실체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Provocations by nK

Lee, Yoon-Gyu

The nK has often infiltrated and provoked against South Korea with various ways and means such as ground, maritime and air, aiming to communize entire Korean Peninsula since Korean War. Such actions of infiltration and provocation have been taken as following cases.

First, they have chosen any time and any places. If necessary, they selected the times which they deemed advantageous, regardless of various locations including maritime, air, domestic and abroad. Second, they have employed any ways and means. They applied many kinds of ways and means such as naval vessels, aircraft, artilleries, hijacking and blasting. Even more they selected any kinds of targets such as armed forces, USFK as well as normal people and President. Third, the pattern has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and the strength of provocation and level of threat has been increased steadily. In the beginning a small number of agents and spies infiltrated in the territory of South Korea but as the time passes, the intensity of provocations have been increased steadily as scores of agents' infiltration, a torpedo attack against ROK navy warship and direct firing toward civilians in the land of ROK happened. Forth, in order to conceal their provocation and maximize effectiveness, they tried to build up tension and performed 'disguised peace offensive', subsequently concluding to 'Peace and War Strategy' according to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set up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very difficult to estimate the time and pattern of nK's infiltration because identifying their internal situation in advance is quite hard,

which nK normally takes provocative action toward ROK in order to overcome internal instability through the provocation as the survival strategy. Henceforth, nK is possibly supposed to elevate the level of military threat such as nuclear, missile and shelling NWI. Furthermore, non-military threats, known as hacking, electronic warfare, propaganda maneuvers, psychological warfare, will be developed in various ways. The provis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nK's military & non-military and non-regular provocations should be established as follows. First, we should read the intention and nature of nK's provocation. Especially, we should be alert to the provocation running parallel with 'disguised peace offensive' and it is imperative to have the national and military leaderships' resolution and nation's strong willing to make strong reprisals against provocations regardless of escalation of engagements. Second, we should strengthen a deterrence capability by consolidating ROK-US alliance and combined forces. Third, we should build up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with regard to threat of nuclear, missile and non-military provocations by nK. With reflecting on the lesson of continuous provocations by nK for 6 decades since Korean War, also penetrating the strategy of dictatorship survival and sensing the intension and indications of provocation in advance, the preemptive action and military readiness posture should be reinforced.

Key Word : Provocation against the South, Infiltration, Infiltration and Provocation, Local Provocation, Armed Guerrillas, Provocation against NLL, Violation of Armistice, Case of Provocation, Revolutionary Communization, The nature of Infiltration and Provocation